

행정학개론

[총평 : 이경]

더운 여름, 지방직 시험이 채 끝나기 전에 시험을 치른 수험생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2020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상당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새로운 학자, 이론 등을 비롯하여, 이전에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들도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강생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의 집행(8번), 공무원의 인사이동(10번), 조직 내 갈등(11번), 공리주의(15번), 정책변동(17번), 세계잉여금(20번) 문제가 낯설게 여겨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국회직이나 서울직 문제에서 한번씩 언급된 주제이지만 행정학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부문별 문항분포>

구분	총론	인사	조직	재무	정책	지방자치
문항 수	3	3	4	3	5	2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 어떻게 공부해야하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어렵고 세부적인 내용이 출제되었다고 하여 공부의 양을 갑자기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수험의 기본적 방향인 기출 주제 중심으로 공부하되, 최근 5년간 출제된 기출주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주제를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험은 우리의 손을 떠났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곧 다가올 국가직 9급 시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략적 사고와 우직한 태도는 수험을 넘어 일에 있어 성공의 필수요소입니다. 시험에 있어 전략적 사고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의미하며, 우직한 태도는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성실하게 채워나갈 것인가**를 말합니다.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갖추어야, 시간의 낭비없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파이팅!

- 이 경 드림-

문 1.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 ①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
- ② 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 ③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 ④ 정치·행정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총론-1] 정치행정이원론

- ① [O] 정치행정이원론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와 분리된 행정을 강조한다.
- ② [X] 뉴딜정책은 1929년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결정(정치) 영역이 확대된 것으로, 정치행정이원론과 관련된다.
- ③ [X] 효율성과 관리성을 강조하는 과학적 관리론과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행정개혁운동은 정치행정이원론의 근거가 된다.
- ④ [X] 애플비(Appleby) 행정과 정치의 연속적 관계를 강조한 학자로 정치행정이원론자이다. 애플비(Appleby), 디목(Domick)은 1930년대의 정치행정이원론인 통치기능론을 주장한 학자이며, 화이트(White), 굴릭(Gulick) 등은 정치행정이원론(고전적 행정학)에 속한다.

문 2.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 ①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된다고 본다.
- ②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고 한다.
- ③ 위협과 같은 폭력적 방법을 통해 특정한 이슈의 등장이 방해받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 ④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정책-1] 무의사결정론

④ [X]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는 것은 외부주도형의 특징이다.

- ① [O] 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론자들의 주장으로 엘리트의 기득권을 보호하려한다. 따라서 변화를 위한 주장을 통제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
- ② [O]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에게 '잠재적이고 현재적' 위협을 억제하는 권력이 작용한다는 것으로, 엘리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안전한 이슈만 논의된다고 주장한다.
- ③ [O] 무의사결정론은 폭력적 방법, 비폭력적 방법이 모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무의사결정권력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트 또는 관료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조성될 경우 • 정치체제 내부에 특정한 개인들과 집단의 이익에 편파적으로 작용하는 지배적 가치, 신념, 양식, 제도적 절차와 같은 '편견의 동원'이 존재하는 경우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설정: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 정책결정: 정책대안의 범위나 내용을 한정·수정하려고 노력한다. • 정책집행: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예산이나 인력을 최소화한다. • 정책평가: 엘리트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행위, 구타, 암살, 처벌 등 폭력을 사용한다. • 기존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이익으로 매수한다. •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새로운 요구를 제지한다(편견의 동원). • 정치체제의 규범·규칙·절차 등을 수정·보완하여 정책의 요구를 봉쇄한다. • 사회문제를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규정한다 • 자연전략으로 정치적 압력을 축소시킨다. • 적응적 흡수(Co-optation)로 반대집단의 핵심인사를 흡수하여 반발을 무마한다.

문 3.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 ①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한다.
- ③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 ④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자치-1] 지방자치

② [O]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 ① [X]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 중에서 우리나라의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X] 지방의회는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 제정권을 가진다.
- ④ [X]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이며 '제주시'는 행정시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문 8.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무-1] 예산의 집행

- ① [O]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 43조 제2항)
- ② [X] 예산배정은 분기별로 이루어진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X]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배정이며, 이를 하부기관에게 할당하는 것이 재배정이다.
- ④ [X]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예산배정의 과정>

제출(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장관) ⇨ 예산배정계획서 작성(기획재정부장관 → 국무회의 제출, 대통령 승인) ⇨ 예산배정 통지(기획재정부장관 → 감사원) ⇨ 예산배정(기획재정부장관 → 중앙관서의 장) ⇨ 예산재배정(중앙관서의 장 → 산하기관의 장)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하여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문 9. 정책평가를 위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 ①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도구가 있을 수 있다.
- ② 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는 있을 수 없다.
- ③ 신뢰성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다.
- ④ 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는 제1종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책-3] 타당성과 신뢰성

- ③ [X]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이다.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 1. 제1종 오류: 옳은 귀무가설(영가설)을 기각하고 틀린 대립가설(연구가설)을 채택, 틀린 것을 옳은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
⇨ 정책의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 정책결정과 평가 단계에서 발생
- 2. 제2종 오류: 틀린 귀무가설(영가설)을 채택하고 옳은 대립가설(연구가설)을 기각, 옳은 것을 틀린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
⇨ 정책의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 정책결정과 평가 단계에서 발생

문 10.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 ①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겸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② 전직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③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다.
- ④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

[인사-2] 인사이동

- ③ [O]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서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규정한다.
- ① [X] 겸임은 특정직 공무원에 한하지 않으며, 겸임기간은 2년 이내이고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공무원 임용령 제40조 제3항).
- ② [X] 전직은 전직시험을 통과하여야 가능하다(공무원 임용령 제29조). 전직시험 없이 전직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로는 1.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2.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등에 한한다(공무원 임용령 제 30조).
- ④ [X] 강임시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또한,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문 11.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 ① 과업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 ② 고전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한다.
- ③ 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정보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 ④ 진행단계별로 분류할 때 지각된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조직-3] 갈등관리

- ④ [X] 지각된 갈등은 구성원이 인식하게 된 갈등이며,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은 잠재적 갈등을 의미한다.
- ① [O] 상호의존성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 ② [O] 행태주의 이전의 고전적 관점은 갈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 ③ [O] 과도한 정보는 갈등을 유발한다.

문 12.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한다.
- ③ 계획예산제도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이 필요하다.

[재무-2] 예산제도의 특징

① [X]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산출물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산편성제도의 비교>

	품목별 예산(LIBS)	성과주의 예산(PBS)	계획예산(PPBS)	영기준예산(ZBB)
발달시기	1920~1930년대 발달, 지속	• 1930년대 도입 • 1950년대 확산	1960~1970년대 발달	1970년대 이후 발달
지향	통제	관리	계획	간축
정보의 초점	품목의 지출	기능, 사업, 활동, 과업의 과정	과업의 목표, 정책(프로그램)	예산의 편익/비용
분석기반	전년도 예산	원기분석과 과학적 관리법	경제학과 시스템 분석	비용편익계산
평가	투입	성과(산출)	사업(프로그램)	사업
관심 가치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능률성, 효율성
결정의 형태	상향적	상향적	하향적	상향적
결정의 유형	점증모형	점증모형	합리모형	합리모형
결정권의 소재	분권화	분권화(관리기능 집권화)	집권화	분권화

문 13.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 ①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보건소의 운영업무와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 사무이다.
- ③ 중앙정부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 ④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자치-2] 업무

② [X] 보건소 운영업무는 단체위임사무이며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기관위임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구분과 특징>

구분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사무처리주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의 장
의사결정주체	지방의회	지방의회	국가
조례제정	가능	가능	불가
주된 이해관계	지역적 이해관계	지역적·전국적 이해관계	전국적 이해관계
경비부담주체	자치단체	자치단체와 국가	국가
예시	학교, 병원, 도서관, 도로, 상하수도, 주택, 쓰레기, 도시계획, 소방 등	보건소의 운영·각종 예방접종, 시·군의 재해 구호, 생활보호, 국도유지 및 보수, 조세·공과금 징수위임사무 등	국회의원 선거, 행정경찰, 면허, 인구조사, 지적, 도량형 등
국가의 감독	합법성 중심, 사후감독	합법성·합목적성 중심, 사후감독	합법성·합목적성 중심, 사후·사전감독

문 14.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 ① 법적·제도적 접근 방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행정 현상의 설명변수로 규정한다.
- ②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 등도 포함한다.
- ③ 후기 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행정을 자연·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한다.
- ④ 툴민(Toulmin)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환경을 포함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 현상을 분석하고, 확실성을 지닌 법칙 발견을 강조한다.

[총론-2] 행정학의 접근방법

② [O]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은 비공식적 규범을 포함하여 제도로 인식한다.

- ① [X]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주요 변수로 설명하는 것은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이다.
- ③ [X] 후기 행태주의는 행태주의의 사실적, 가치중립적 접근방법을 비판한 것으로 행정의 가치 지향성과 처방성을 강조한다.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한 것은 생태론, 체제론이다.
- ④ [X] 논변적 접근방법은 담론을 통해 행정학의 가치를 모색하는 접근법이다. 환경을 포함한 거시적 관점에서 일반적 법칙을 연구한 것은 체제론의 특성이다.

문 15.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③

- ㄱ.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
- ㄴ. 목적론적 윤리론을 따르고 있다.
- ㄷ. 효율성(efficiency)보다는 합법성(legitimacy)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총론-3] 공익

③ [O]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는 것으로 효용에 초점을 두는 목적론적 윤리론에 해당한다. 효율성을 규범적 합법성보다 중시한다.

문 16.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 ①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 ②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 ③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 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 ④ 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조직-4] 책임운영기관

④ [X]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은 1999년에 도입되었다.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 NPM적 행정개혁의 일환
 가능한 분야: 공공성이 강해서 시장화 곤란, 성과관리 용이, 내부시장화 필요, 수익자 부담 가능

- 특징**
- 기존의 정부 조직에서 집행 조직을 분리시켜 집행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함.
 - 공익성과 관리의 유연성을 통한 효율적 자원관리와 서비스 개선이 목적
 - 영국의 Next Step Program(1998), 한국은 1999년 도입 + 현재 50여개 기관 운영
 - 근거법령: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문 17.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 ①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이론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 ② 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에서 이슈 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을 말한다.
- ③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유지라 한다.
- ④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이라 한다.

[정책-4] 정책결정모형

③ [X] 정책목표와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정책의 수단이 변화한 경우에 정책변동이라고 한다.

<정책변동의 특징>

(Policy Innov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가 지금까지 관여하지 않았던 분야에 개입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결정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대 조직
정책유지 (Policy Mainte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의 정책이 가진 기본 특성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예산·집행절차의 변경이 있더라도, 정책의 기본특성이 유지된다면 정책유지로 간주 정책의 집행과정 변화와 현재의 특수사정에 적응하기 위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 정책목표와 '실질적' 정책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 자유무역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련 예산액을 감축
정책승계 (Policy Succe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의 중요한 일부를 없애거나 새롭게 추가하거나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함(정책수단의 핵심이 되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정책유지는 정책내용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므로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지만, 정책승계는 정책의 큰 수정이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함. 정책목표는 그대로 유지
정책종결 (Policy Termi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정책을 소멸시키는 것 정책변동의 유형 중 가장 저합이 심하다. 원인: 심리적 불안, 조직의 연속성, 종결을 위한 관계 법령의 미비, 각종 비용 해소방안: 사전예고 없이 종결, 동조세력 확보, 홍보, 외부인사를 통한 정당성 확보, 대가 지불, 영기준예산이나 일몰법 같은 제도의 정비 폭발형(단일의 중대한 결정에 의해 종결), 점감형(서서히 소멸), 혼란형(폭발형과 점감형의 혼합적 성격)의 유형이 존재함.

문 18.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 ① 인사혁신처는 비독립형 단독제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이다.
- ② 전문경력관이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 ③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이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 ④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사-3] 인사제도

③ [X]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이다.

문 19. 정책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④

- ㄱ. 매개변수 - 독립변수의 원인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
- ㄴ. 조절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 ㄷ. 억제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 ㄹ. 하위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 사이의 공동변화를 설명하는 제3의 변수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정책-5] 정책결정모형

④ [O]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결과이자 종속변수의 원인인 변수이다. 억제변수는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변수이다. 하위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비하위적 관계를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제3의 변수이다. 지문의 내용은 혼란변수에 해당한다.

<제3변수의 종류와 특징>

구분	내용
구성변수	하나의 추상적인 포괄적 개념은 다수의 구체적인 하위개념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하위개념을 지칭
매개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를 매개하는 변수로, 독립변수의 결과이면서 종속변수의 원인
선행변수	독립변수에 선행하여 영향을 주는 변수
억제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실제의 관계가 있는데도 없어 보이게끔 만드는 변수
왜곡변수	독립·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하위변수	관계가 없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관계가 있게끔 보이도록 하는 변수
혼란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의 크기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변수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제 3의 변수

